

---

## 농업인력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

마 상 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msj@krei.re.kr

1. 농업취업자가 늘고 있다!
2. 왜 그런가?
3. 무엇을 해야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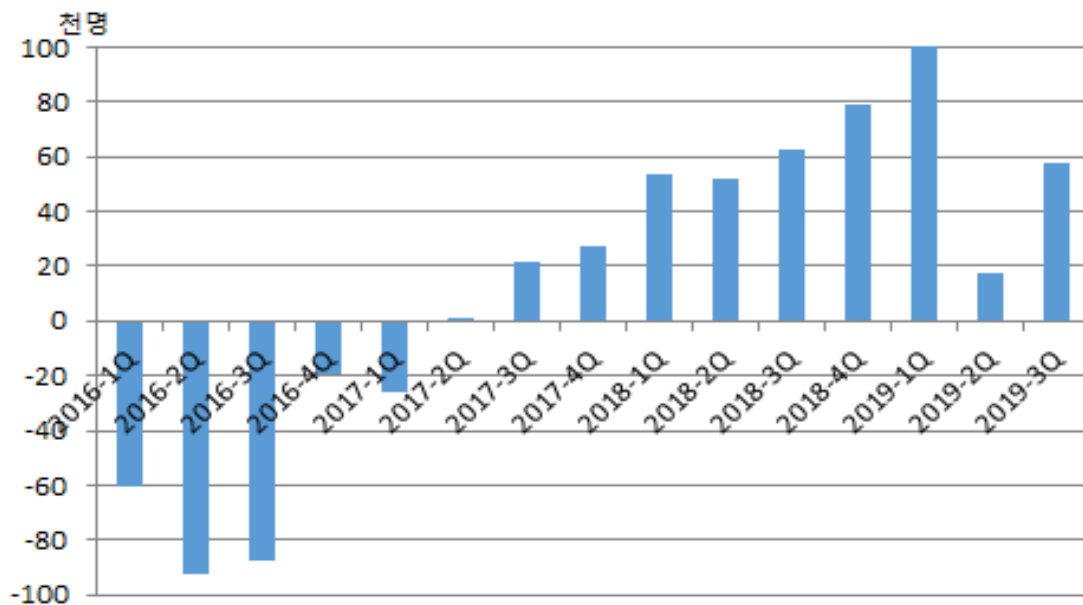


## 농업인력의 New Waves, 르네상스는 올까?

### 1. 농업취업자 늘고 있다!

- 우리나라의 농림어업 취업자는 1970년대 중반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1976년 551.4만 명이던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지난 40년간 연평균 3.6%씩 감소하여 2017년 127.9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지난 40여년간 농어민 후계자 사업이 추진된 첫째 1981년, IMF 사태 발생 그 이듬해 1998년 두 번 증가한 경험이 있다.
- 하지만 2017년 중반이후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그림 1>). 2017년 3분기 전년 동기대비 2.1만 명 증가한 이후 월간 조사기준으로 24개월 연속으로 2019년 3분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2018년 농림어업 취업자 수 전년대비 6.2만 명, 2019년의 경우 3분기까지 5.9만명 증가).

그림 1.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 (전년 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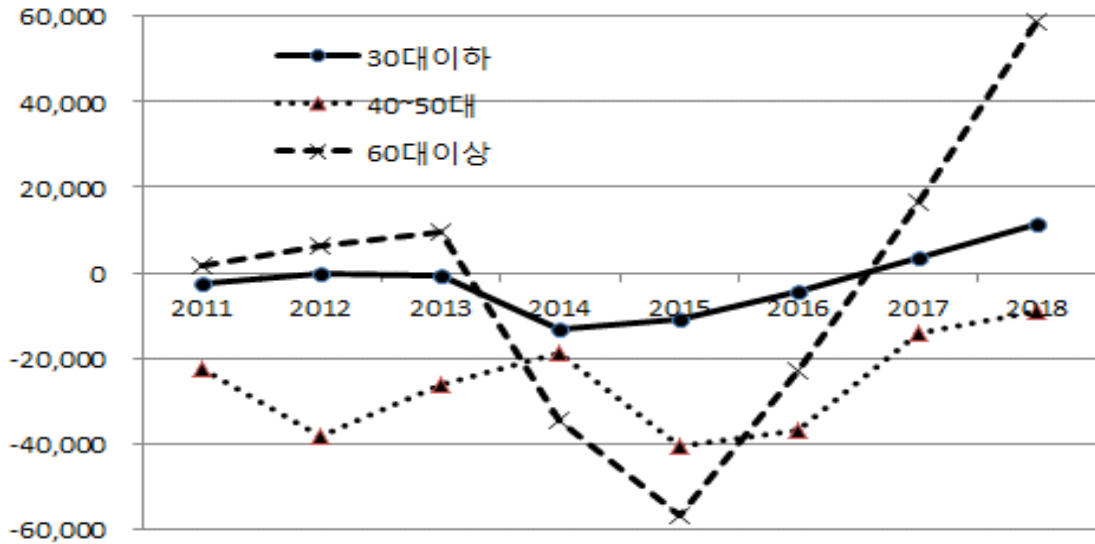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령대별로 30대 이하와 60대 이상에서 많이 증가하였다(<그림 2>). 2017~18년 연속으로 30대 이하에서 3.7천명, 11.6천명이 증가했고, 60대 이상에서 16.6천명, 58.8천명이 증가한 반면, 40~50대에서는 14.2천명, 8.9천명이 감소하였다.

#### 4 농업 농촌을 바꾸는 네가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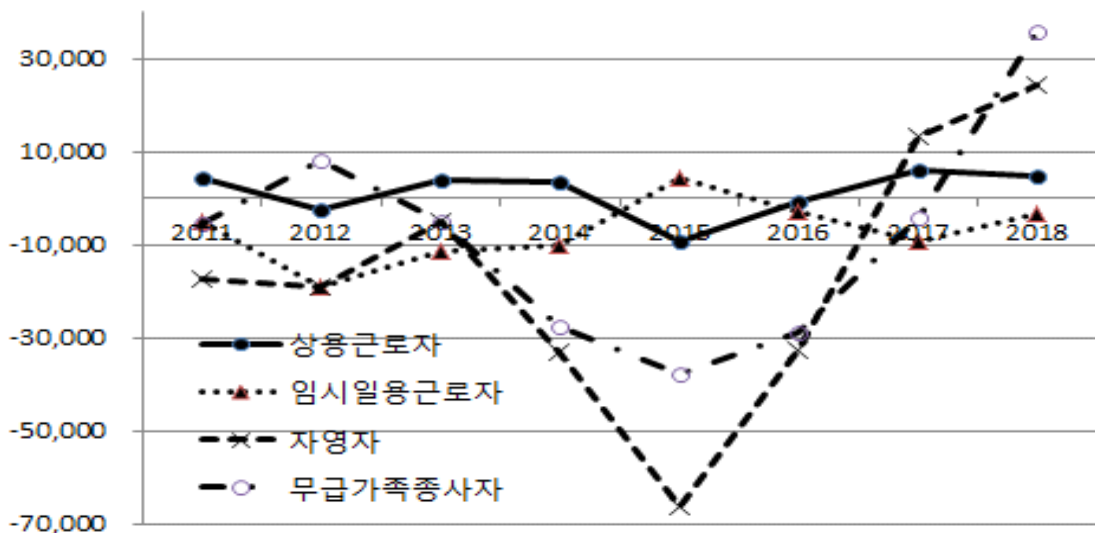
그림 2. 연령별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고용인력은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증가하였다(<그림 3>). 자영업자는 2017~18년 연속으로 13.3천명, 24.2천명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018년에 35.8천명이 증가하였다. 고용인력으로 임시·일용근로자는 2017~2018년 연속으로 9.3천명, 3.3천명 감소한 반면, 상용근로자는 6.2천명, 4.8천명 증가하였다.

그림 3. 종사상 지위별 농림어업 종사자 증감(전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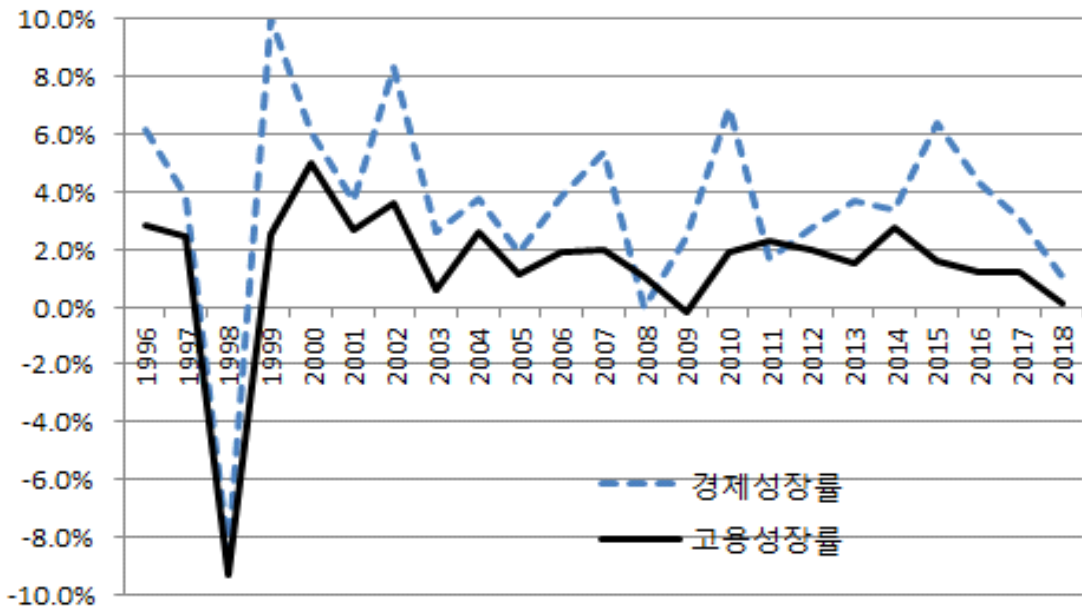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 왜 그런가?

### 1) 비농업분야 저성장 기조

-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률이 5%이하로 떨어졌고, '10~'18년에는 평균 3.4%를 기록하고 있다. 2035년 이후에는 1%대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성장이 고착화될 전망이다(OECD 2017).
- 지난 20여년간 비농업분야 경제성장률과 고용성장률이 정체된 시기에 대규모 귀농이 있었는데, 최근 3년(2016~2018년) 비농업분야 경제성장(GNI기준)이 2.8%(2018년은 1.0%), 고용성장률 0.9%(2018년은 0.1%)였다(<그림 4>).

그림 4. 비농업분야 경제성장률 및 고용성장률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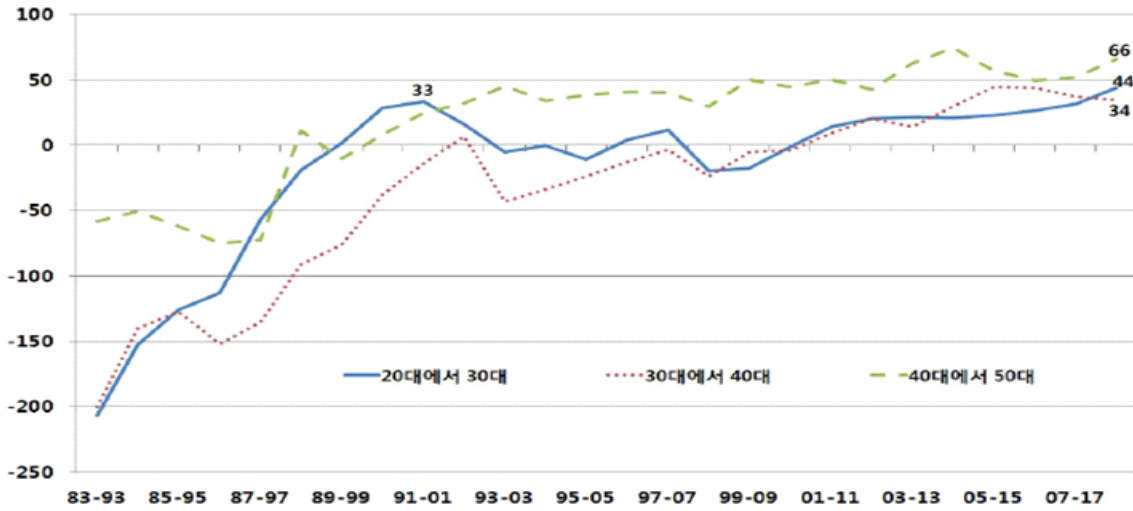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민계정, 경제활동인구

- 비농업분야 특히 조선,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의 산업성장·고용율이 저하되면서 주력산업 집적지역의 지역경제의 쇠퇴와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있다.
- 이정환(2019)은 저성장 시대에 진입에 따라 젊은 인력이 비농업에서 농업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였다(<그림 5>). 1990년대 초까지는 50세 이하의 전 연령계층에서 인력이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이동하였으나 1990년대 초에 40대였던 세대부터 이동 방향이 비농업에서 농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2008년에 40대였던 인력 중에서 2018년까지 10년 사이에 약 6만 6천명이 농업으로 이동(귀농)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6 농업 농촌을 바꾸는 네가지 변화

5. 연령계층별 농업-비농업 간 인력 이동 변화: 방향과 이동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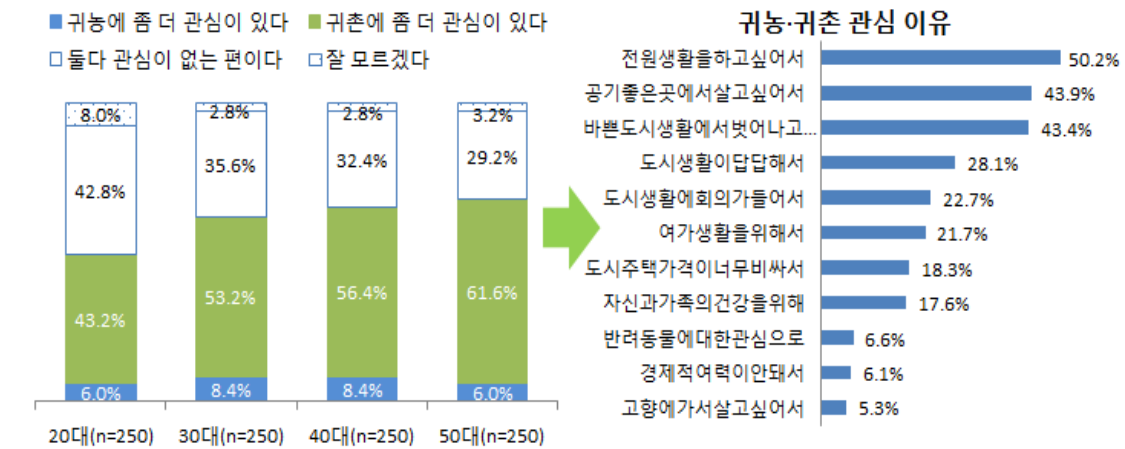
주: 이동량이 마이너스면 이농, 플러스면 귀농을 나타내며, 연령 계층별 농업취업자수와 10년 잔존률(1-사망률)로부터 코호트 방식으로 추정함. 자료:이정환(2019)

### 2) 후기 산업사회의 탈 도시화 현상

- 후기 산업사회에 접어들며 선진국에서는 탈도시화, 농촌지향 문화가 사회적으로 팽배하는데 최근 한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서구에서는 19세기 중반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 100여년이 지난 1960~70년부터 새로운 삶을 택하는 도시민들이 나타나면서 탈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도시 중산층들은 산업발전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렸으나 대도시 인구집중에 의한 도시문제의 발생과 자본주의의 모순을 목격한다. 산업문명에 대한 비판과 성찰은 생태 이데올로기로 나타났고, 도시보다는 농촌이 산업문명에 덜 오염된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송인하 2013). 이러한 생태주의 운동은 미국에서 시작하여 1970년대 유럽으로 이어져 보편적인 사회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다(Halfacree 2007)(박시현 등 2014 재인용). 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인구 3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비대도시 지역 카운티(county)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박성희 2012). 프랑스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인구 2천명 미만 농촌 코문의 인구가 매년 1%씩 증가하고, 영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농촌 인구 증가가 나타난다(성주인 외 2012). 이웃 일본에서도 1990년대 들어 헤이세이(平成) 대 불황에 의한 비농업 부문의 기업 도산·인력 구조 조정·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신규취농촉진사업의 강화, 농업·농촌의 가치 재조명 등을 통해 전원회귀(田園回歸) 인구가 증가한다(신경미 2018).

- 최근 한국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 뿐 아니라 전세대에 걸쳐 농촌 지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 사회 전반적으로 워라벨(일work과 삶life의 균형) 지향 흐름과 더불어 반농반X(半農半X) 삶에 대한 선호 등 대안적 삶에 대한 요구가 전 세대에 걸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6>). 시골 생활 관련 TV프로그램(나는 자연인이다, 삼시세끼, 섬총사 등), 영화(리틀포레스트, 파밍보이즈), 유튜브(버라이어티파머, 농사직방) 증가하는 현상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의 단면을 볼 수 있다(마상진 등 2019).

그림 6. 50대 이하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자료: 엠브레인(2018)

**생태가치실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농촌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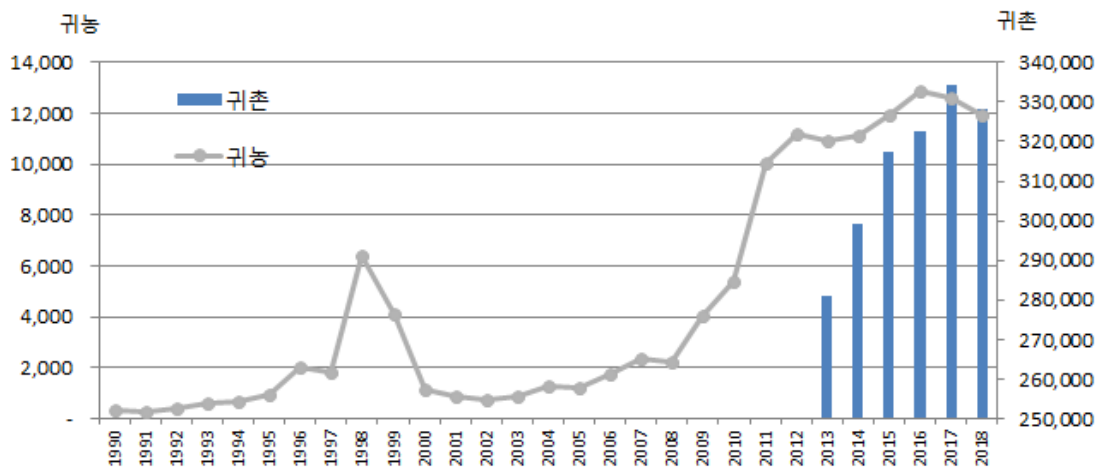
-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 land) 운동으로 대변되는 생태주의 귀농 운동은 1960년대와 7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서 발생하였음(박시현 2014). 이 운동은 단순히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아니라, 1960년대 주류 사회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에 정반대되는 가치관이 응집된 문화 현상으로서 자연과 토지에 강하게 연계된 삶의 형태임(Halfacree 2007). 땅으로 돌아가기(back-to-the land) 운동은 산업문명에 대한 반문명적(counter-cultural)인 성격을 강조함. 이는 삶의 가치 실현으로서의 공동생활 추구, 토지경작, 자족적인(self-reliance) 삶, 그리고 생태적인 삶 등을 실천하는 특징을 보임.
- 미국에서 발생하였지만 1970년대 프랑스, 영국에서도 발생함으로써 보다 보편적인 현상으로 주목을 받았음(Halfacree 2007). 하지만 이 운동은 1970년 중반 이후 그 열기가 주춤하다가 2000년대 초에 퍼머컬처 운동과 유기 소농 조직의 탄생으로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음(Permaculture Association 2006).

## 8 농업 농촌을 바꾸는 네가지 변화

### 3) 귀촌인의 농업종사

- 최근의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는 귀농인의 증가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귀농가구는 2011년 1만호를 넘어선 이후 8년째 정체 상태인 상태이다. 반면, 귀촌가구는 2013년 28만 호를 기록한 이후 2015년 30만 호를 넘어섰고, 2018년 32.8만 호에 이르고, 가구원을 포함하면 47.2만 명 수준이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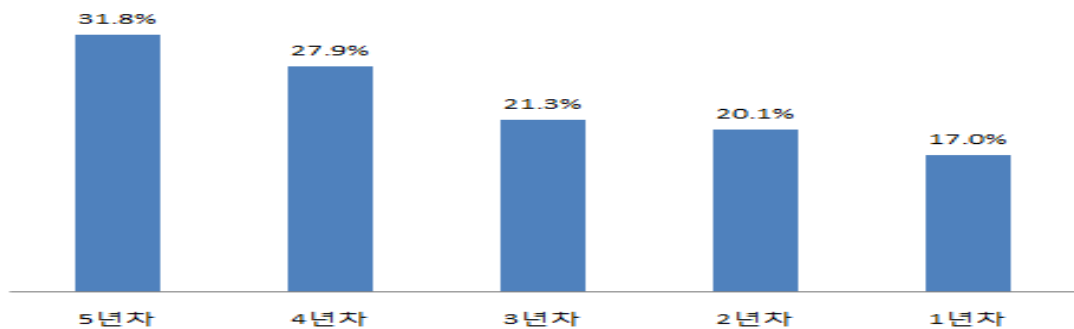
그림 7. 귀농·귀촌 가구 동향(1990~20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귀농·귀촌통계.

- 상당수 농림어업 종사자는 귀촌 가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 5년 귀촌한 가구 23.4%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있었고<sup>1)</sup>, 농촌 생활 연차가 쌓일수록 등록 비율이 높아졌다(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갤럽 2019)(<그림 8>).

그림 8. 귀촌 연차별 농업종사(농업경영체등록) 비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갤럽(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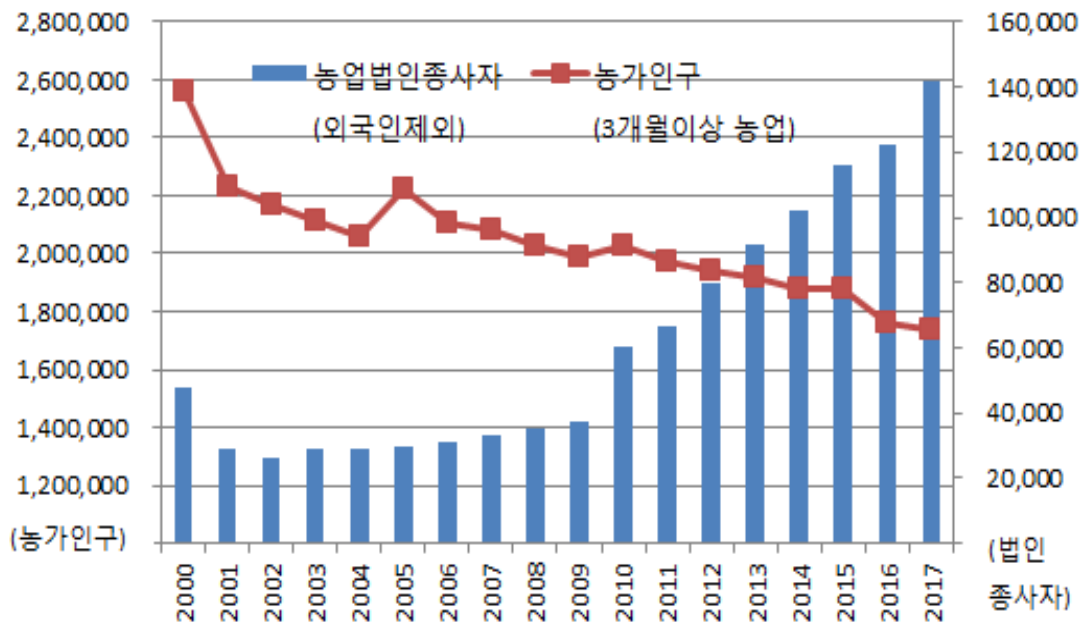
1) 통계청의 행정통계에 의한 작성한 귀촌인과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실태조사' 대상으로서의 귀촌인은 다를 수 있다. 행정통계상의 귀촌인에는 대도시 인근 읍면의 대규모 주거단지 거주자도 귀촌인으로 간주되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표본조사에 의한 귀촌인 조사대상에는 이들이 포함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 4) 농업 노동인력구조 변화

- 농가의 농업종사자는 감소하는 반면,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다.
- 농업부문의 법인경영체수의 급격한 증가와 그에 따른 고용 증가도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 증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3,366개이던 법인 수는 2017년 2만개를 넘어섰고, 종사자수도 47,996명에서 14천 명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지난 16년간 농가 중심의 종사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농업법인종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농가인구(3개월 이상 농업종사), 농업법인 종사자수 변화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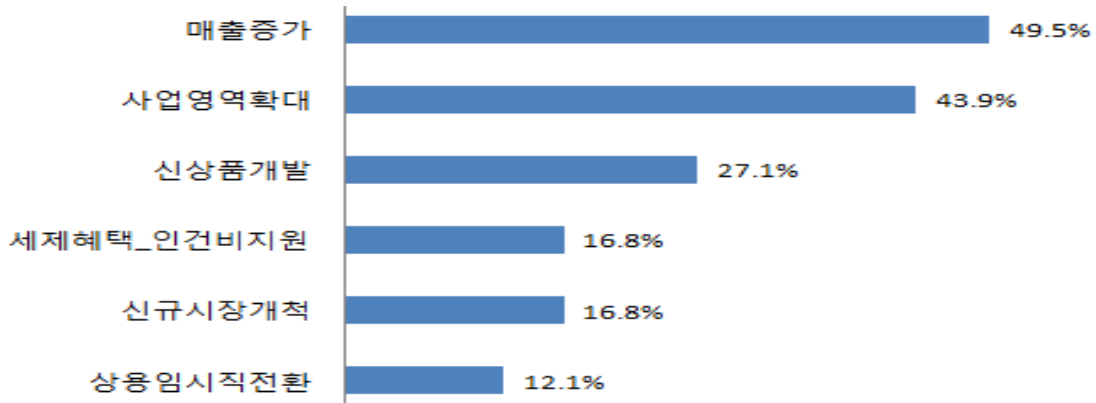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농업조사·농어업법인조사

- 농업법인체에 대한 설문조사결과<sup>2)</sup> 전체 업체 중에 지난 1년간 고용이 증가한 경우가 60.4%, 감소한 경우가 11.0%(변화없음 28.6%)로 증가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업체 평균 2.1명 증가). 고용이 증가한 이유로는 매출증가(49.5%), 사업영역확대 (43.9%), 신상품개발(16.8%), 세제혜택이나 인건비 지원(16.8%), 신규시장개척(16.8%), 일용직을 상용임시직으로 전환(12.1%) 순이었다<그림 10>.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전국의 농업법인 (201개 )의 고용실태를 2018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웹기반 설문으로 조사하였다(사업분야: 농산물생산 26.4%, 농산물가공 37.3%, 농산물유통 31.8%, 기타(체험관광, 농기계 등) 4.5%)

## 10 농업 농촌을 바꾸는 네가지 변화

그림 10. 농업법인의 고용 증가 이유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내부자료

### 5) 농업 정책 요인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40세 미만 청년 창농자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기초생활비 지급) 추진은 청년층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청년직불제’로 공론화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세부적 제도설계를 통해 대대적 홍보가 되어 창농을 생각하는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다.
- 2018년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자는 5,164명으로 선정자(1,600명)의 3배가 넘었다(<표 1>). 2018~2019년 두해 선정자 3,200명 중에 3/4 이상이 예정자나 당해 연도 신규 유입자였고, 2/3가 귀농자로 이 사업이 도시에 머물던 청년의 영농 승계 또는 신규 창업을 유도한 효과 있음을 암시한다.

표 1.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현황(2018~2019)

	연도	예정자	영농경력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2018	680	653	183	84	1,600
	2019	950	464	126	60	1,600
귀농 여부	귀농	680	653	183	84	2,281
	재촌	950	464	126	60	1,55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법인 중심의 고용 활성화 관련 정책(농업법인 취업 및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농촌관광,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등)의 직·간접 효과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표 2>.

표 2.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법인 고용 관련 사업

사업명	주요 내용
취업지원	영농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 농업부문 신규인력 유입 촉진
농업경영체 전문인력 채용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우수인력의 농산업 유입으로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향상 및 농고·농대생의 취업 연계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농촌융복합산업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육성 및 지역단위 발전체계 고도화
농촌관광	지역 특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농촌여행 기반 구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회적농업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 및 취약계층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공동체 활성화 도모
신활력 플러스 추진	지역 특화자원 및 인적역량을 활용해 산업고도화 및 생활문화기반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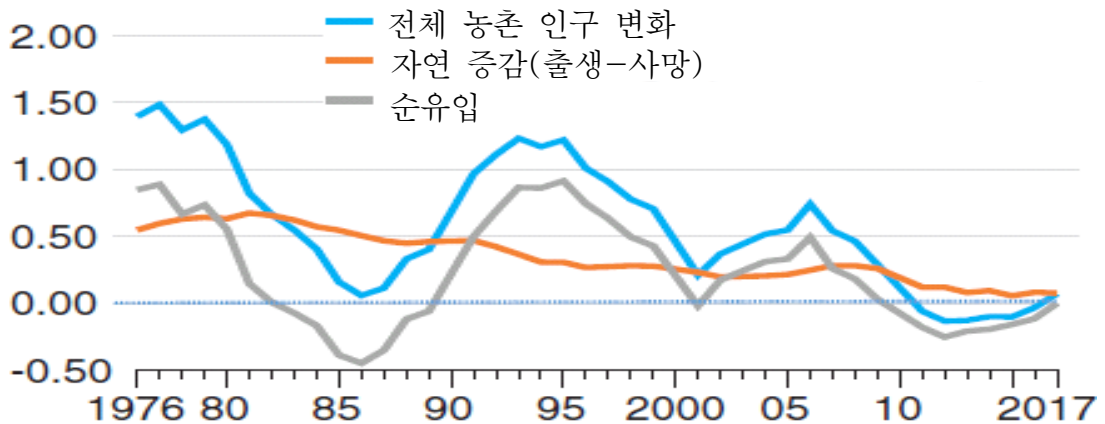
### 3. 무엇을 해야하는가?

- 최근 농림어업 고용 변화와 관련한 여러 요인을 감안해 볼 때, 작년과 같은 높은 증가세는 아닐지라도 꾸준히 농업 분야로의 유입이 예상된다.
  -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분석한 학자들은 그 원인을 도시의 압출(Push) 요인(경기침체, 고용불안, 높은 생활비용 등)과 농촌의 흡입(Pull) 요인(쾌적한 환경, 대안적 보람있는 삶) 증가에서 찾고 있다.
  - 도시 또는 비농업분야의 경제상황이나 불안한 고용 여건이 당장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KDI(2018)의 2019년 국내경제전망을 보면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면서, 2018년(2.7%)보다 소폭 낮은 2.6%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베이비부머(1955 ~ 1963년생)의 은퇴가 계속되고, 이들 다수고 은퇴후 귀농을 생각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8) 국민의식조사 결과 베이비부머의 42.1%가 귀농·귀촌할 의사가 있었다.

## 12 농업 농촌을 바꾸는 네가지 변화

- 일자리 증감에 있어 정책 요인도 중요한데 범 정부차원의 일자리 우선정책과 더불어, 농업 분야의 일자리 관련 사업(예비 청년농자를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확대, 농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확대, 지역푸드플랜확산,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 유희시설 활용한 창업지원 등)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들어서면서 갑작스런 귀촌 현상으로 나타났다가 1980년대에는 수그러들었다가 1990년대 다시 나타나고 1990년대 말 줄었다 2001년 이후 1990년대 초에 비해서는 많이 적지만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부침이 있지만 최근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그림 11. 미국의 농촌 인구 변화 추세: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USDA ERS(2018)

- 농업인력 정책의 기회, 바람 불 때 돛을 올려야 한다(이정환 2019).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경제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저성장 구조가 되고, 젊은 인력의 귀농 증가 현상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부터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본격화되는 추세이다.
  - 이러한 산업구조의 거시적 변화 추세를 가속시킨다면 농업인력 구조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고, 농업·농촌의 발전 동력을 증대시키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바로 지금이 젊은 인력이 스스로 귀농을 결정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시기이다.
- 지역 농업인력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단위 농업인력육성 계획의 수립이다. 지역 농업특성을 반영한 청년농 육성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발전에 의미가 있는(도움이

되는) 청년농을 어떻게 선발, 육성, 정착시킬 것인지 구체화하여야 한다. 현재는 광역이든 기초든 지자체 단계의 중장기적 농업인력육성 목표 자체가 없다 보니 관련 사업이 지자체장 또는 농정 책임자의 변동에 따라 연계성 없이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마상진 외 2013; 마상진·권인혜 2014).

- 일본은 1990년대부터 지자체 단위의 농업경영기반 및 농업인력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식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건설한 농업 담당자의 확보가 긴급한 과제로 부각되어, 다른 산업 수준의 노동 시간과 소득을 실현하는 효율적, 안정적인 경영체 육성정책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농업 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1993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에서는 농업 경영의 규모 확대, 생산 방식·경영의 합리화, 농업인의 개선 등 농업 경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을 지자체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지역 농업을 책임지고 담당할 농업인을 인정하는 인정농업자 제도를 창설하였다.

**일본 지자체 단위 농업경영기반 강화 및 농업인 육성 계획**

- 농업인의 경영 합리화, 농업경영 기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하여 농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법이 설립되었다. 이 법에서는 광역(도도부현), 기초(시정촌) 지자체 단위의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기반강화 및 농업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 도도부현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의 기본 방향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기본지표
  - 신규 취농 청년 등에게 목표가 되어야 농업경영기본지표
  - (효율적이고 안정적 농업을 하는) 인정농업자에 의한 농지 이용 집적 목표
  -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
- 시정촌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 기본구상에서 정하는 사항
  -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의 목표
  - 농업경영규모, 생산방식, 경영방법, 농업인의 형태 등 영농 유형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지표
  - 농업경영규모, 생산방식, 경영방법, 농업인의 형태 등 영농 유형별 신규 취농 청년 등의 농업경영지표
  - 인정농업자에 의한 농지 이용 집적 목표, 기타 농지이용 개선사항
  - 농업 경영 기반 강화 촉진 사업에 관한 기타 사항
  - 농지 이용 집적 원활화 사업에 관한 사항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2015).

## 14 농업 농촌을 바꾸는 네가지 변화

- 지역의 농업인력 육성체계 수립 차원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 있는 지자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업인력육성 계획(목표와 달성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처럼 농지 계획과 함께 농업인력 육성 계획을 수립하면 더 좋으나, 최소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농업인력육성 계획, 특히 시급한 청년 농업인 육성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000개 마을이 있는 광역지자체에서는 마을당 1명의 신규 젊은 인력(40세 미만)을 배치하겠다는 목표를 가진다면 매년 500명씩 10년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의 가용한 청년농 확보 경로별로 구체적 육성계획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연중 농고 졸업생이 1,000명 중 10%인 100명, 농대 졸업생 1,000명이면 이 중 10%인 100명, 귀농자 1,000명 중 20% 200명, 기타 경로 100명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목표 설정은 농업계 학교나 귀농교육 그리고 지역의 창농 지원조직 및 관련 사업에 대한 구체적 투자계획으로 이어질 것이다<sup>3)</sup>.

### ○ 지역 영농정착 지원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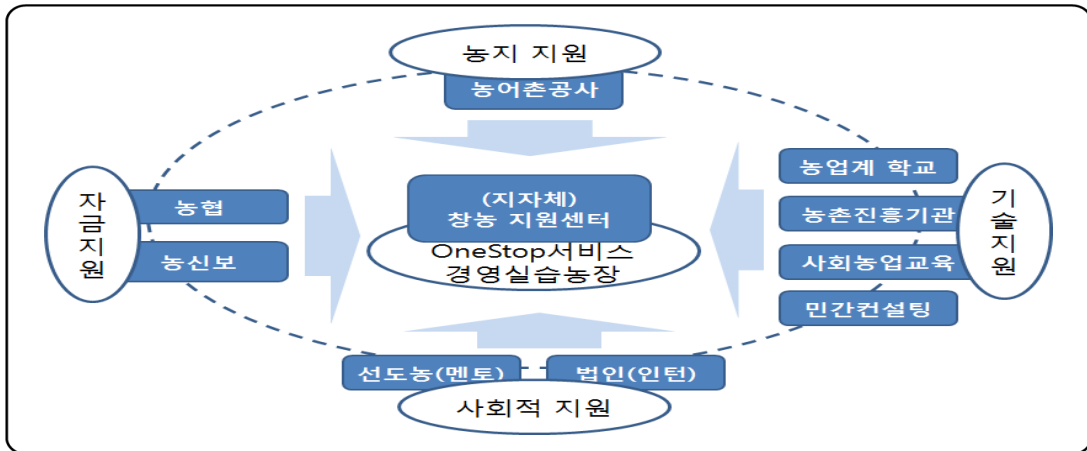
- 농업인력육성 관련 주체들의 참여에 기반한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지역 단위 청년 창농뿐 아니라 귀농, 농업 교육, 농업 고용 등의 역할을 포함한 농업인력 육성 관련 업무 전반을 전담할 지원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 농업인력육성 지원이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윈스톱 창농지원조직은 창농 상담→교육→정착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기술·자본·사회적 지원이 패키지로 전달되도록 지역 단위에서 전담하는 조직이다(<그림 12>). 전담조직은 공무원만으로 구성·운영되기보다 민간 전담자 채용이 필요하다(개방형 공무원제도를 활용하여 민간 전문가를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무원은 업무 이동이 잦아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 기존 농업·농촌개발 관련 조직(귀농 귀촌지원센터, 마을만들기협력센터, 6차산업지원센터, 농촌활성화지원센터)의 통합·운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농어업회의소<sup>4)</sup>의 주요 업무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3) 국내에서는 경상북도가 가장 선도해 지자체 단위의 농업인력육성계획에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2013년부터 청년 농업 인력확보를 위해 농고생·청년귀농인을 중심으로 젊고 유능한 정예인력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시작하였다(마상진 외 2013: 127). 향후 25년간 도내 자연마을당 1명의 청년을 육성·배치하겠다는 장기 계획을 수립 후 도내 유관기관(농고·농대, 농협, 농어촌공사)과 협력하여 교육, 창업지원, 계속교육을 책임진다. 기초 지자체의 경우 관련 인적·물적 자원이 많지 않고 지역 농업인력육성계획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우선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도내 농업 관련 현황을 토대로 도 단위 농업인력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군 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점차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83.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농어업회의소 법제화가 약속되어 있음(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122). 김현권 의원실(2017)이 제안한 농어업회의소 법률안에 의하면 농어업회의소의 핵심 업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농어업 관련 정책의 자문·건의,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설정하고 있음.

- 광역지자체 수준에서는 농업계 대학, 도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업·농촌 관련 각종 민간 컨설팅 기관 등이 연계하여 청년 창농에 대한 보육(incubating), 기초 지자체 단위로 추진하기 힘든 품목별 (청년) 농업경영체 간 네트워킹 지원, 신규 창농자의 정착을 종합적으로 도울 코디네이터나 멘토 육성, 신규 창농자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해야 한다. 기초지자체 수준에서는 교육·기술지원(농업계학교, 농업기술센터, 지역 전문대학, 사회농업교육기관, 민간컨설팅업체), 자금지원(농협, 농신보), 농지지원(농어촌공사), 사회적 지원(선도농, 농업법인) 관련 기관과의 연계 속에 지역 밀착형 창업·보육 및 역량 계발을 지원하고 신규 예비 인력을 발굴해야 한다. 지역 내 다양한 농업교육 활동을 조율하고, 농업 구인·구직 연계(계절 노동 포함) 및 농업 취업정보를 제공하며, 외국인노동자·일용직·도시유휴노동력 등에 대한 기초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농업법인체를 지원하고(전문인력 취업 및 경력교육,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노령농업인의 농장 활용(신규 취농자 연계) 활성화 지원 등을 구체적 역할로 삼을 수 있다.

그림 12. 지역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센터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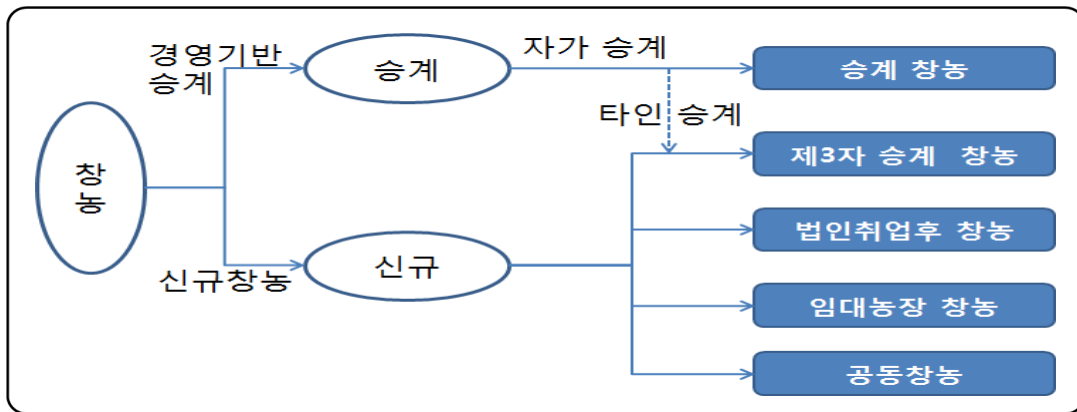


자료: 마상진 등(2017)

- 지역 단위 원스톱 창농지원조직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창농 상담·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로 개척과 더불어 정착까지 창농 유형별 맞춤형 지원해 주는 것이다. 부모로부터 경영기반을 승계하는 경우(승계 창농), 부모 영농기반이 없는 경우로 나누고, 특히 영농기반이 없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창업 모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그림 13>). 후계자가 없는 농가의 영농기반을 신규 창농자에게 승계해주는 제3자 승계 창농(사회적 승계 창농), 농업법인에 일정 기간 취업하여 인건비를 받고 법인 일을 도우면서 영농 기술과 경험을 쌓은 후 법인이 가지고 있는 각종 네트워크를 이용하며 창업하는 법인 취업후 창농, 영농기반이 없는 창업농에게 창업초기 일정 기간 자기 책임하에 농업 경영 연습 공간을 마련해주고 이후 독립하도록 하는 임대농장 창농, 개인이 가진 전문성, 자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 방향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와 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창업하는 공동 창농 등 다양한 신규 창농 모형을 운영해야 한다.

16 농업 농촌을 바꾸는 네가지 변화

13. 청년 창업농 유형



자료: 마상진 등(2017)



### <참고문헌>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갤럽. 2019.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 1990~2018. 『귀농·귀촌인 통계』.  
 마상진·박대식·안석·황정임·남기천. 2018. 『귀농·귀촌인의 정착실태 장기추적조사: 종합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마상진·정도채·민경찬. 2019. 『농업·농촌 일자리 증가, 어떻게 볼 것인가』. 농업전망 2019.  
 마상진·정은미·김경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성희. 2012. 미국의 귀농·귀촌사례. 세계농업 14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시현·최용욱. 2014. 『귀농·귀촌 요인과 농촌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박시현·김용렬·윤병석·남기천. 2012. 농어촌 정주공간의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인하. 2013. 『생태가치 귀농인의 농촌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 경제목적 귀농인과의 비교』.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경미. 2018. 일본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및 우수사례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이정환. 2019. 농업인력의 르네상스가 올 것인가?. 시선집중 GSNJ 제271호.  
 日本 農林水産省. 2015. 農業經營基盤強化促進法の基本要綱.  
 Berry, J. W. 1976. Urbanization and counterurbanization. Beverly Hills, Calif. : Sage Publications.  
 Champion, A. J. 1989. Counterurbanization in Britain. The Geographical Journal, 155(1): 52~80.  
 Dahms, F.A., McComb, J. 1999. 'Counterurbanization', Interaction and Functional Change in a Rural Amenity Area: a Canadian Example. Journal of Rural Studies 15(2), 129-146.  
 Fuguitt, G. V. 1985. The Nonmetropolitan Population Turn-around. Annual Reviews of Sociology, 11, 259-280  
 Halfacree, K. 2007. Back-to-the-land in the Twenty-First Century - making connections with rurality.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98(1):3-8.  
 Halliday, J., Combes, M. 1995. In Search of Counterurbanisation: Some Evidence from Dev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tterns of Migration and Motivation. Journal of Rural Studies, 11(4), 433-446.  
 Hosszú, S. 2009. Counterurbanization: A Literature Study. Danish Institute of R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Nivalainen, S. 2003. Who Move to Rural Areas? Micro Evidence from Finland. Paper to be presented in ERS 2003, Jyväskylä, Finland.

## 18 농업 농촌을 바꾸는 네가지 변화

- Spencer, D. 1997. Counterurbanisation and rural depopulation revisited: landowners, planners and the rural development process. *Journal of Rural Studies*, 13(1), 75-92
- Van den Berg, L. et. al. 1982. *Urban Europe. A Study of Growth and Decline*. Oxford: Pergamon Press
- USDA ERS. 2018. *Rural America at a Glance*.
- Vartiainen, P. 1989. Counterurbanisation: a challenge for socio-theoretical geography. *Journal of Rural Studies*, 5(3), 217-225.